

전남광주 출범 후 첫 국정감사…광역행정 통합 ‘시험대’

22일 광주청사서…행정체계·정부 인센티브 등 점검
반도체 클러스터·여수섬박람회·국립의대 주요 쟁점
오늘부터 한전·경찰청·전남대 등 주요 기관 검증대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22일 열린다. 통합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문제, 여수세계섬박람회 운영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교육청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전KDN 등 나주 혁신

도시에 위치한 전력 관련 공공기관, 광주 고등법원, 전남대학교,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의 감사도 예정돼 지역의 주요 현안이 국회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통합특별자치 광주청사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진행되는 감사는 지난 7월 통합특

전남광주 주요기관 국감 일정

일자	대상기관
19일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전MCS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교육청
20일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광주화생방병원, 광주중수청, 광주공소청
21일	전남대학교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

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로,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사례인 만큼 통합 행정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출범 과정의 행정체계 정비와 인사, 재정 운용, 기존 현안사업 승계, 통합에 따른 국비·재정 지원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이 핵심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업 구상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군공항 이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과 용수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되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린 광주 군공항 이전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박람회 초반 준비 부족과 콘텐츠 부족 논란이 일었던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원들이 공직자 국외연수 근황, 목표 관람객 추산 근거, 예산 증액 및 집행 현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며 철저한 검증이 예상된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으로 꼽힌다.

순천대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된 후 후보대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후보 대학 선정 절차와 향후 설립 일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19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전MCS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이 국회의 검증대에 선다.

20일에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과 광주화생방병원 등이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감사를 받는다. 광주과학기술원과 국립광주과학관은 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교육청도 같은 날 전남청사에서 교육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통합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에는 전남대학교, 22일에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성호 기자 goback@gwangnam.co.kr

■ 민형배 시장-최취영 문체부 장관 여수서 정책간담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장이 지난 17일 여수 소노캄 사파이어 1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정책간담회’에서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亞문화중심도시 국비 상향·전국체전 지원 확대 필요

오는 2028년전국체전 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정부에 대회 운영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곡성군 경정장 조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지원을 상향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에 따르면 민형배 특별자치장은 전날 ‘2026 문화의 달 기념식’에 참석차 여수를 찾은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민 시장은 행정통합을 계기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해 5국3특시대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모형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민 시장 “통합 효과 시민 삶 스며들게 문화예술 지원”
최 장관 “정책 수요 공감…지역과 소통 확대해 가겠다”

민 시장은 이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곡성군 경정장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비지원을 상향, 2028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등 현안에 대해 최 장관과 협의했다.

곡성군 경정장 조성은 수상레포츠 관광단지와 연계한 사업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여가 기반을 지역으로 확충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됐지만 그동안 국비 투입률이 32%에 머물고 있다. 민 시장은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국비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2028 전국체육대회”는 통합특별자치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 체육 행사로, 통합특별자치 전역의 경기장을 활용해 준비 중이다. 민 시장은 현재 정액으로 지원되는 대회 운영비를 보조율에 따른 정률 지원으로 전환해 국가와 통합특별자치시 함께 대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취영 문체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의 행정통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여건 변화와 증가하는 정책수요에 공감했다. 최 장관은 “5국3특시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문체부도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데 바다, 섬, 미식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전남광주가 그 중심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풍부한 해양·생태·관광 자원을 품은 전남이 하나가 되면서 더 큰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남광주에 들어서면 전환점을 맞아 문화적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어 “오늘 건의한 현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차 이전 공공기관, 40% 수도권 조직 유지”

조인철, 2차 이전 앞두고 잔류 기준·사후관리 보완 필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전기관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수도권에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서구갑·사신)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지방이전 대상 105개 기관 중 42개 기관(40.0%)이 수도권에 잔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인원은 총 2321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 241명, 한국예탁결제원 180명, 한국인터넷진흥원 174명, 국민연금공단 135명 순이었다. 상위 5개 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원은 1021명으로, 전체 잔류 인원의 44.0%를 차지했다.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 가운데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83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 49명, 한국콘텐츠진흥원 45명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과 2027년 선도 이전 착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이전기관의수도권 잔류 승인 기준과 혁신도시 집적 배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이전 이후에도 2000명이 넘는 인력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만큼, 잔류 기능의 필요성과 적정 인력 규모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분사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능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분산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차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잔류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 2차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해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시 미래대응기금 도입 대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찬대 인천광역시)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재원 조성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기금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적립액을 제외할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축소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가 복지·돌봄·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이미 어려운 지

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서는 안 된다 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하여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며 “기금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과 배분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향후 미래대응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산구, 확정·고시…송정1교 삼거리~극락교 교차로 5855m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에 호남반도체를 상징하는 명예도로명인 ‘반도체로’(Bandoche-ro)가 생겼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과 호남권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홍보를 위해 명예도로명 ‘반도체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 ‘반도체로’가 부여된 구간은 광산구 월정동 송정1교 삼거리(월전동 918-1)부터 신촌동 극락교 교차로(신촌동 1) 인근까지 이어지는 상부대로 일부 구간으로, 총길이는 5855m이다. 사용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앞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통합반도체로’와 ‘미래통합반도체로’ 등도 후보로 제시됐다. 광산구 주소정보위원회는

해당 명칭들을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반도체로’를 선정했다.

광산구는 해당 구간에 명예도로명 안내판을 설치해 ‘반도체로’의 의미를 알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의 미래 성장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명예도로명은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 등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도로구간에 부여하는 상징적인 도로명이다. 기존 도로명주소를 대체하지 않으며, 법적 도로명주소 사용에도 변동이 없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명예도로명 ‘반



도체로’가 지역의 미래 성장의 지지를 상징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는 현재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가 모두 10곳이며, 광산구에는 삼성로(삼양로), 운상원길(천동길), 운상원민주로(임곡로) 등 3곳이 있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